

동생 영장 기각에 더 세진 '조국 공방'

14개 상임위 국감...자녀 장학금·인턴·논문 등 난타전 여 "의혹만으로 이해충돌 안돼" ... 야 "檢 압박해 수사 방해"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야당은 '여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펼쳐졌다.

이날 14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의 최대 쟁점은 역시 조국 장관이었다.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총동창회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적극 거론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서서의 진위

를 가릴 것도 촉구했다. 또한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맞불을 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연결한 반면, 한국당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에서의 영장 기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한국당 엄홍수 의원은 김현준 청장에게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거듭 질의하고는 "정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이 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조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누락 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여야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

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은경 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연구 윤리 의혹을 제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해군 "원자력잠수함 확보 노력 北 SLBM 추적·격멸에 유용"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

해군은 10일 해군력 강화 조치 등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육·해·공군 3군 통합기치인 총합계통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구상을 밝혔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김정수 기획관리참모부장(기참부장)은 이 TF에 대해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참부장

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의 이런 입장은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 지역 의견 청취

14~30일 전남·전북 등 7개 도 방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는 내년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4~30일 7개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를 방문해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다. 지역별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솔인이 참석해 지리적 여건, 교통

등 지역 사정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의 전체 조건인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내년 선거까지 시한이 촉박해 7개 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며 "일정에 미포함된 지역 의견도 향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양경계선 결의안 채택

현행 유지 촉구

전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 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 1)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전남도와 경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경남도 등은 청구를 기각할 것과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을 고려하면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첫 회의를 시작하더라도 순항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정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핵심인 정치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협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 전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에 반발해 구 수산법에서 규정한 조업 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자체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만큼 경남 측이 주장한 경계선은 수산법에 의해 권한쟁의 어업의 조업 구역을 나누는 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도의회는 "경남 측이 주장한 해역은 오랜 기간 전남도와 여수시의 행정 권한이 미치는 합법적인 해역"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 "당정 재정회의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어"

조국 장관 임명 찬·반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등 두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 거취가 지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강 센터장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 발언을 함께 소개하며 답변을 마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치협상회의 출발부터 '삐끗'

여야, 첫 회의 개최 일정 놓고 이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오트만에 여야가 의기투합한 정치협상회의가 첫 회의 개최 일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출발부터 삐끗하는 모습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은 지난 7일 열린 초월회에서 정치협상회의의 가동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동에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정치협상회의 개최에 호응했다. 실무적 준비 등을 고려해 11일이 유력한 첫 회의 날짜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11일 회의'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황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가 11일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말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첫 회의를 시작하더라도 순항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정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핵심인 정치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협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7년
77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앙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중앙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우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침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전대 융복합인사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신탁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수료 0원임대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